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26회 제2차 정례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18. 12. 11 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1. 19.
- 회부일 : 2018. 11. 20. (의안번호 :18 - 120)

### 2. 개정이유

-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마포구청연구단(한시기구) 설치 근거 마련(안 제3조의3)
- 나.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 신설(안 부칙 제2조)

#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  
(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)부터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까지

## 5. 검토보고

-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마포구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마포구청연구단 설치 근거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
### 《구청연구단 인원구성안》

- 구청연구단은 7명으로 구성하며, 행정5급 단장 1명, 일반직은 행정7급 1명, 행정8급 1명이고, 임기제 2명은 시간선택제 나급(6급상당) 1명, 다급(7급상당) 1명으로 신규채용하고, 연구원 2명은 서울연구원에서 지원받을 예정임.

### 《서울시 25개 자치구 연구 전담조직 현황》

-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전담조직 신설 2개구
  - 양천구: 미래도시기획단(2014.7월) 부구청장 직속 6명으로 구성
  - 성동구: 구정기획단(2014.7월) 전담조직 신설하여 부구청장 직속 5명으로 구성
- 정책연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청장 주요역점사업 추진업무 3개구
  - 용산구: 행복드림추진단(2018.7월) 담당관 직속으로 15명으로 구성
  - 중 구: 새중구기획단(2018.8월) 구청장 직속으로 6명 구성
  - 광진구: 정책기획단(2018.10월) 부구청장 직속으로 7명으로 구성

-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하는 12개구  
: 종로, 강북, 노원, 은평, 서대문, 마포, 강서, 영등포, 관악,  
서초, 강서, 송파
- 자문단 미운영 8개구 : 동대문, 중랑, 성북, 도봉, 구로, 금천,  
동작, 강동

### 《자치구별 정책개발 부서 문제점 및 원인분석》

- 전담기구를 둔 자치구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군의 인원구성  
으로 연구의 한계의 문제점 노출.
- 자문단 운영하는 자치구 문제점은 구정에 대한 단순 자문으로  
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 및 의사  
결정에 한계가 있음
- 4년마다 선출직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연구 전담조직이  
사업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변형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 연구기관  
운영의 지속성 불투명 함.  
(※ 광진구는 96년도 신설하여 정책과제 및 발굴하여 좋은 성과를  
거두었으나 민선5·6기 구청장이 단순기능의 정책팀으로 축소  
후 민선7기 새로운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10월에 다시 정책기획단  
으로 재설치 함.)

### 《구정연구단 설치.운영 필요성 및 문제점》

- 자치구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특성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 
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구정연구단 운영 필요성에 공감

- 자치구의 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정책 연구 개발 필요성 증대
-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로 정책 확대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주민의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성
-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자치구 사무 및 예산 확대 전망
- 5개 자치구에 의견조사결과 구정연구단 설치 필요성에 동의 (2018.9.7. 의견조사 자치구: 성동, 노원, 서대문, 구로, 강동)
- 설문조사시 문제점으로는 전문인력 확보,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된 만큼 재원 확보의 대책이 필요

#### 《서울시로 부터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계획》

- 서울연구원 내 자치구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
- 서울연구원과 각 자치구 간 MOU 체결
-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연구원 필요시 석·박사급 1~2명 파견 및 신규채용으로 지원
- 1단계 2019년도 희망자치구 시범지원 후 2단계 2020년 이후 전 자치구 확산
- 2021년 3년간 한시적 운영 후 자치구별 지속적 연구협력과 지원 요청 시 연장운영 검토추진

#### 《구정연구단 활성화 방안 지원계획》

-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분야 선정공유
- 연구수행 과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연구과제 1건당 1천만원 지원

- 연1회 우수 연구사례 공유회 개최하여 최우수 최대 10억원, 우수구 최대 5억원, 장려 3억원 포상금 지급지원
-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행 의무 이행제를 시행하고 연구수행 결과 평가로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

### 〈검토의견〉

- 마포구청연구단 설치계획안은 자치분권시대 중장기 전략 및 주민참여 요구의 다양성을 볼 때 예산의 계획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마포구의 자문단은 단순 자문으로 전문연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고, 부서별 연구 용역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성화된 분야별 용역 외 단순 용역은 구정연구단을 구성함으로써 비용절감,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5개 자치구 설문조사 나타난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